수사구조개혁, 現 정부 임기내 해결 노력

- 이택순 경찰청장, 국민신뢰 얻기 위해 내실 다질 터 -

이택순 경찰청장이 최근 『수사구조 개혁 문제는 현 정부 임기내에 해결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사구조를 개선·개혁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제, 『정부안만 도출되면 2월이나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문제는 양 기관(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맞서서 타협이 쉽지 않는 만큼 현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의 조정안 마련 작업이 잘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청장은 수사구조개혁 문제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와의 접촉여부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자체안이 이미 나와 있어 청와대와 총리실을 매개로 회의, 위원회 등을 통한 대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양 기관의 입장 차가 커서 아직 지휘부간 만남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 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기준으로 수사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경찰은 내실을 다져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 강제인치나 호송 등은 (이를 지휘복종 관계로 보는 검찰과 달리) 기관간 협조 문제로 본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며, 이 문제의 논의도 가시적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수사 강화 방안으로는 『수사요원의 자질 향상과 장비 및 시설의 전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폐쇄회로 TV에 찍힌 용의자의 신원을 신속하게 밝힐 수 있는 '얼굴인식 시스템', 용의차량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리얼타임 차량추적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자외선 지문감식기, 공기정화 지문현출시스템, 기억반응 탐지기, 지방경찰청별 '다기능 증거분석실' 등 시설과 장비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경찰청 이관에 대해서는 『「국과수」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경찰청 소속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돼 있어 경찰청이 예산·인력·장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면서 『과학수사를 위한 감식 업무의 중립성은 철저히 견지하되 체계적 지원과 예산 투자를 위해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 경찰지휘관 혁신워크숍 개최

-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감동치안 실현 -

경찰청은 지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이택순 경찰청장을 비롯한 46명의 경무관 이상 전국 경찰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지휘관 혁신워크숍을 개최하고 경찰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구상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자」는 구호 아래 일선 경찰과 지휘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감동치안을 실현하겠다'는 경찰지휘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그 일환으로 첫째 날에는 「현장 속으로」 라는 주제 아래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관 모두가 전의경과 함께 집회 시위 관리훈련 체험을 하는 한편 가상의 대테러 시나리오에 따라 극한의 상황에서 요인을 보호하는 과제를 수행해 내며 일선 근무자와 똑같은 근무방식으로 지구대를 비롯한 교통단속과 형사활동 등 야간 현장체험을 했다.

아울러 일선현장의 애환과 고충을 있는 그대로 가슴으로 느끼기 위해 주취자 보호 및 민원응대 상황 등을 사실대로 담은 상황 연극과 함께 현장 근무자의 솔직한 목소리도 들었다.

또한 둘째 날에는 「시민 곁으로」 라는 주제 아래 어려운 역경을 헤쳐 성공신화를 이루어 낸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혁신 특강을 통해 무한경쟁 시대에 발맞춰 치안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경찰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 공감하고 그 의지를 모아 「경찰과 나」 라는 화두로 지난 경찰생활에 대한 회고와 성찰을 통해 경찰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구상하여 가슴에 새기는 타임캡슐 행사를 가졌다.

뿐만아니라 장애우 시설 방문을 통해 소외계층의 삶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경찰의 사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 경찰청장은 이번 워크숍에 대해 『올해 경찰 혁신의 주요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사진은 서울경찰청 총경급 워크숍 모습.

평화 집시법안 주요 골자

〈1면에 이어〉

청원 법안의 주요 골자

1. 법률의 명칭

종래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과거 반정부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역사로 인하여 그 명칭이 거부감을 주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현행 집시법을 폐지 또는 내용 변경. 그 명칭 역시 평화적인 집회는 적극 보호한다는 취지를 반영

▶ 청원법률안(명칭) : 법률의 명칭을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 보호·보장에 관한 법률"로 함.

2. 경찰의 집회 보호 의무

주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 경찰서장은 그 집회·시위를 보호할 의무 부여

▶ 청원법률안(제3조제4항) : 관할 경찰서장은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방해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주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방해를 배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3. 유령집회신고 금지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두 개 이상의 시위나 집회를 금지하는 점을 악용하여 타인의 집회·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 청원법률안(제7조, 제24조) : 유령집회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함.

4. 사소한 신고보완사항에 대한 집회금지 결정 제한

긴요한 사항 즉, 중대한 사항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

▶ 청원법률안(제9조 제1항) :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로서 그 사항이 공공질서 위해여부에 대한 판단에 중대한 사항일 때 한하여 그 집회를 금지할 수 있음.

5. 도심집회 금지에 대한 결정 권한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도심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금지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관할경찰서장의 자의적 결정에 의한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권한을 경찰과 시민으로 구성된 집회·시위 심의위원회에 부여

▶ 청원법률안(제22조) : 도심집회에 대한 결정권한을 각 경찰서별로 5-7인의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경찰서장으로 구성된 집회·시위심의위원회에 부여 함.

6. 벌금형의 강화

현재 집시법의 벌금형의 상한은 각 행위 유형별로 50만원-300만원에 불과한데, 집시법이 1989년 전면 개정된 이후 벌금형 액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그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저하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은 현행법의 벌금형의 상한 액수를 증가시켜 벌금형의 실효성 제고

▶ 청원법률안(제23조 내지 27조) : 벌금형 상한액수를 현재 금액의 5-10배 증액시킴.

7. 시위 주최자에 대한 제재의 강화

현행 집시법 제14조 제1항은 시위주체자(단체)에게 집회·시위시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14조 제4항은 집회 참가자가 총이나 폭발물을 휴대한 경우 및 폭행·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집회 주최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제19조제3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형이 턱없이 미약하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청원법률안(제17조제4항, 제23조제2항) : 집회참가자가 총이나 폭발물을 휴대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집회주최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8.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법은 제12조의 2에서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침범하였을 경우 6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법정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청원법률안(제14조, 제21조제1항 제6호, 제26조 제1항) :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음.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집회·시위에 대하여 경찰이 2차례 경고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할 경우 제21조에 의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음.

9. 복면시위 금지

폭력시위 참가자 중 복면, 마스크, 손수건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시위를 더욱 폭력적으로 만들 뿐만아니라 신원확인이 어려워 이 폭력 시위자가 처벌받을 가능성 희박.

▶ 청원법률안(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제7호, 제26조제2호) : 복면이나 마스크 기타 신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를 금지함. 시위주최자 및 복면참가자에게 복면의 제거를 요구하고 2회 불응시 제21조에 의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을 명할 수 있음. 복면시위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또한, 복면착용자 및 그 집회의 주최자가 복면 제거 불응시 질서유지선 침범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함.

10. 촬영에 의한 채증(採證)

시위대중 경찰의 채증행위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찰의 시위대촬영에 대한 채증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청원법률안(제20조제2항) : 경찰은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옥외 집회 또는 시위현장에서 위법행위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촬영을 할 수 있음(다만, 촬영은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만이 하도록 함).

경찰간부 후보생 경쟁률 51 : 1 사상 최고

- 국민신뢰 및 경찰위상 적극 반영 분석 -

50명을 모집하는 금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총 2천 529명이 지원함으로서 51대 1이라는 사상 최고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긍정적인 이미지 향상 등 한층 높아진 경찰의 위상 등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간부후보생제도는 해방이후인 1947년 9월 1일 지적수준이 높은 고급경찰간부를 충원하고 경찰의 자질 향상을 통한 식민지 경찰의 잔재를 불식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고급경찰간부 양성제도로 탄생했다.

이 제도는 지난 1947년 9월 제1기생 93명을 모집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국립경찰전문학교 캠퍼스에서 교육을 시작한 이래, 1957년 2월 제11기부터는 대학출신자를 모집 경찰의 자질 향상 및 전문교육을 위하여 52주간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76년 9월 제25기부터는 보다 많은 인재들의 기회 제공을 위해 학력제한을 철폐했다.

그 후 경찰간부후보생제도는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발전하였고, 2000년부터는 정원의 10퍼센트인 여자 경찰간부후보생 5명을 모집하여 고급 여성인력을 채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4월 제54기생이 졸업하여 현재까지 총 3천 828명의 경찰 초급간부를 양성하여 13명의 치안총수를 배출하는 등 경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와 호흡을 같이 해 오고 있다.

간부후보생들은 졸업 후 경위로 임관되어 모집 경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통상 지구대 1년,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정복부서 6개월, 형사·정보 등 사복부서 6개월의 총 2년간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이후 본인의 적성이나 희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사배치를 받게 된다.

경찰청, 허윤석 화백 특별 초대전

경찰청은 최근 1층 로비 문화마당에서 허윤석 화백의 특별 초대전을 갖고 직원들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켰다.

이번 전시회에는 허 화백의 호랑이 그림 등 40여점이 전시되어 경찰청 직원 및 청사 주변 직장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인 사

◆ 경찰청

▲본청 홍보담당관 정철수 ▲본청 감찰담당관 옥도근 ▲본청 감사담당관 정순도 ▲본청 감사관실 장경석(승후) ▲본청 감사관실 임용환(승후) ▲본청 교통기획담당관 노승일 ▲본청 교통안전담당관 김학역 ▲본청 경찰혁신기획단 민갑룡(승후) ▲본청 경찰혁신기획단 김광식(승후) ▲본청 혁신기획과장 황성찬 ▲본청 재정과장 박재진 ▲본청 법무과장 강인철 ▲본청 생활질서과장 이경순 ▲본청 여성청소년과장 이금형 ▲본청 수사과장 안재경 ▲본청 과학수사센터장 남현우 ▲본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 김인옥 ▲본청 지능범죄수사과장 박상융 ▲본청 마약수사과장 이상정 ▲본청 인권보호센터장 조용태 ▲본청 수사국(수사구조개혁) 최동해 ▲본청 수사국 김근식(승후) ▲본청 형사사법통합 양근원(승후) ▲본청 경비과장 장전배 ▲본청 경호과장 김성근 ▲본청 정보1과장 박근순 ▲본청 정보2과장 강신명 ▲본청 정보4과장 이기창 ▲본청 정보국 권기선 ▲본청 정보국 최종헌 ▲본청 보안1과장 김인택 ▲본청 외사정보과장 김병화 ▲병원 총무과장 윤대근 ▲경대 총무과장 이경필 ▲경대 경찰학과장 김남현(승후) ▲경대 교무과장 윤성태 ▲경대 치안정책연구소 허경렬 ▲중앙 총무과장 송민헌(승후) ▲면허 관리과장 이한기 ▲과수 총무과장 한동일 ▲서울 홍보담당관 박기선 ▲서울 청문감사담당관 노혁우 ▲서울 경무과장 이진구 ▲서울 정보통신과장 정경모 ▲서울 생활질서과장 임국빈 ▲서울 수사과장 정해룡 ▲서울 형사과장 한기민 ▲서울 교통관리과장 윤대표 ▲서울 교통운영실장 이강복 ▲서울 경비1과장 신두호 ▲서울 경비2과장 윤종기 ▲서울 정보1과장 조현배 ▲서울 정보2과장 김영식 ▲서울 정보관리부 정성재(승후) ▲서울 보안2과장 강기중 ▲서울 외사과장 홍익태 ▲서울 101부단장 윤철규 ▲서울 1기동대장 이중구 ▲서울 4기동대장 박성수 ▲서울 중앙청사경비대장 고귀영 ▲서울 국회경비대장 백동산 ▲서울 특수기동대장 김영근 ▲서울 종로서장 구은수 ▲서울 남대문서장 장희곤 ▲서울 혜화서장 전석종 ▲서울 용산서장 장광 ▲서울 동대문서장 황광기 ▲서울 마포서장 홍성삼 ▲서울 영등포서장 명영수 ▲서울 성동서장 우문수 ▲서울 동작서장 박진규 ▲서울 강북서장 강경량 ▲서울 중랑서장 김덕섭 ▲서울 강남서장 정수일 ▲서울 관악서장 백승호 ▲서울 강서서장 이조훈 ▲서울 강동서장 박경민 ▲서울 종암서장 홍태옥 ▲서울 서초서장 조성훈 ▲서울 노원서장 양종렬 ▲서울 방배서장 조규철 ▲서울 도봉서장 백광천 ▲서울 수서서장 최현락 ▲부산 홍보담당관 박운대(승후) ▲부산 청문감사담당관 박길수 ▲부산 정보통신담당관 전창학(승후) ▲부산 수사과장 양두환 ▲부산 형사과장 김동현 ▲부산 교통과장 김이곤 ▲부산 경비과장 이승재(승후) ▲부산 보안과장 김석구 ▲부산 외사과장 김경렬 ▲부산 중부서장 김희웅 ▲부산 영도서장 김인규 ▲부산 동부서장 조한성 ▲부산 서부서장 최경호 ▲부산 금정서장 신동건 ▲부산 연제서장 박노면 ▲부산 강서서장 박환두 ▲부산 사상서장 김충규 ▲대구 홍보담당관 서상훈 ▲대구 청문감사담당관 이영태 ▲대구 경무과장 이현희 ▲대구 수사과장 서진교 ▲대구 경비교통과장 유욱종 ▲대구 정보과장 임정섭 ▲대구 보안과장 조무호 ▲대구 중부서장 정지효 ▲대구 동부서장 서현수 ▲대구 서부서장 김성배 ▲대구 북부서장 조희현 ▲대구 수성서장 이재만 ▲대구 성서서장 조두원 ▲인천 홍보담당관 김영효 ▲인천 청문감사담당관 김수철 ▲인천 정보통신담당관 이상원 ▲인천 수사과장 김헌기(승후) ▲인천 경비교통과장 조종립(승후) ▲인천 정보과장 정홍근 ▲인천 국제공항경찰대장 가세로 ▲인천 부평서장 정영호 ▲인천 서부서장 박종위 ▲인천 계양서장 정인식 ▲인천 연수서장 신동곤 ▲인천 강화서장 배상훈 ▲울산 청문감사담당관 박화병(승후) ▲울산 경무과장 김성식(승후) ▲울산 정보통신담당관 윤석원 ▲울산 생활안전과장 이갑형 ▲울산 수사과장 박흥석(승후) ▲울산 경비교통과장 배영철(승후) ▲경기 홍보담당관 이재영 ▲경기 정보통신과장 류복열(승후) ▲경기 경비과장 신상석 ▲경기 생활안전과장(2부) 김용수 ▲경기 형사과장 나옥주 ▲경기 보안과장 김종원 ▲경기 생활안전과장(4부) 신기태 ▲경기 수사과장(4부) 최원일 ▲경기 경비교통과장(4부) 김덕기 ▲경기 기동대장 황규욱 ▲경기 수원중부서장 김운선 ▲경기 수원남부서장 이강순 ▲경기 안양서장 박종환 ▲경기 과천서장 장향진 ▲경기 군포서장 황성채 ▲경기 성남수정서장 오동욱 ▲경기 성남중원서장 김영석 ▲경기 분당서장 김치원 ▲경기 의정부서장 신정배 ▲경기 고양서장 문점호 ▲경기 광명서장 김영태 ▲경기 평택서장 김정훈 ▲경기 남양주서장 정임수 ▲경기 김포서장 박병동 ▲경기 양평서장 장대봉 ▲경기 가평서장 김석암 ▲경기 연천서장 이한명 ▲경기 구리서장 이창균 ▲경기 양주서장 김사웅 ▲경기 경무과(수원권선서 준비요원) 이동수 ▲강원 청문감사담당관 황덕규(승후) ▲강원 경무과장 권순주 ▲강원 생활안전과장 김석렬(승후) ▲강원 경비교통과장 김상운 ▲강원 정보과장 손호중(승후) ▲강원 춘천서장 정명균 ▲강원 강릉서장 박춘배 ▲강원 태백서장 이창무(승후) ▲강원 영월서장 김규현(승후) ▲강원 횡성서장 김교태 ▲강원 고성서장 김춘섭 ▲강원 철원서장 홍순광(승후) ▲강원 화천서장 최영덕(승후) ▲충북 생활안전과장 최경식 ▲충북 수사과장 박세호(승후) ▲충북 경비교통과장 이원구 ▲충북 정보과장 신현옥(승후) ▲충북 보안과장 나경옥 ▲충북 제천서장 박노현 ▲충북 영동서장 송갑수(승후) ▲충북 보은서장 이찬규 ▲충북 진천서장 홍동표(승후) ▲충남 홍보담당관 이철구(승후) ▲충남 청문감사담당관 이상로(승후) ▲충남 경무과장 이병환 ▲충남 정보통신담당관 유현철(승후) ▲충남 수사과장 김기용 ▲충남 대전중부서장 양우석 ▲충남 대전청사경비대장 고학곤 ▲충남 서산서장 박종국 ▲충남 공주서장 유충호(승후) ▲충남 서천서장 전재철 ▲충남 연기서장 김창룡 ▲충남 금산서장 조영수 ▲충남 청양서장 양정식 ▲충남청 (대전청 개청준비) 이익하 ▲충남청 (대전청 개청준비) 임병하(승후) ▲충남청 (대전청 개청준비) 김창수(승후) ▲충남청 (대전청 개청준비) 황순일(승후) ▲충남청 (대전청 개청준비) 고경철(승후) ▲충남청 (대전청 개청준비) 이강수(승후) ▲충남청 (대전청 개청준비) 이주환(승후) ▲충남청 (대전청 개청준비) 이기행(승후) ▲전북 청문감사담당관 한기만 ▲전북 경무과장 유선문 ▲전북 정보통신담당관 박관배 ▲전북 수사과장 이상선 ▲전북 경비교통과장 양희기 ▲전북 정보과장 이승길 ▲전북 보안과장 김명중 ▲전북 전주완산서장 나유인 ▲전북 군산서장 김종길 ▲전북 정읍서장 강현신 ▲전북 남원서장 강이순 ▲전북 김제서장 채수창 ▲전북 완주서장 신상채 ▲전북 순창서장 이평오 ▲전북 장수서장 김성근(승후) ▲전남 홍보담당관 이상기(승후) ▲전남 청문감사담당관 허남석 ▲전남 정보통신담당관 노병현 ▲전남 생활안전과장 김두만 ▲전남 수사과장 백혜웅 ▲전남 정보과장 황호선 ▲전남 보안과장 박용재 ▲전남 광주동부서장 오진선 ▲전남 광주북부서장 윤재문 ▲전남 광주남부서장 이윤 ▲전남 목포서장 정인균 ▲전남 여수서장 김장완 ▲전남 나주서장 정찬명 ▲전남 광양서장 김성국 ▲전남 고흥서장 김학영 ▲전남 영광서장 박동남 ▲전남 화순서장 윤동길 ▲전남 영암서장 안병갑 ▲전남 강진서장 정광록(승후) ▲전남 담양서장 이기옥 ▲전남 무안서장 정성기 ▲전남 구례서장 이희성(승후) ▲전남청 (광주청 개청준비) 천승범 ▲전남청 (광주청 개청준비) 이영 ▲전남청 (광주청 개청준비) 김재병 ▲전남청 (광주청 개청준비) 이영조(승후) ▲전남청 (광주청 개청준비) 이왕민(승후) ▲전남청 (광주청 개청준비) 양성진(승후) ▲전남청 (광주청 개청준비) 김수율(승후) ▲경북 경무과장 김재학 ▲경북 정보통신담당관 김규칠 ▲경북 생활안전과장 김실경 ▲경북 수사과장 김수희(승후) ▲경북 경비교통과장 홍영규(승후) ▲경북 정보과장 정우동 ▲경북 보안과장 이태선 ▲경북 경주서장 하상구 ▲경북 구미서장 전종석 ▲경북 영주서장 전기완 ▲경북 경산서장 현재섭 ▲경북 칠곡서장 배봉길 ▲경북 청도서장 조현배(승후) ▲경북 울진서장 김진표(승후) ▲경북 봉화서장 이양기 ▲경북 예천서장 한영수 ▲경북 성주서장 최성원(승후) ▲경북 청송서장 백준태(승후) ▲경북 영양서장 남병상 ▲경북 고령서장 이석봉 ▲경북 울릉서장 편선재 ▲경남 홍보담당관 윤창수(승후) ▲경남 청문감사담당관 강정태 ▲경남 경무과장 강선주 ▲경남 경비교통과장 김흥진(승후) ▲경남 정보과장 김양수(승후) ▲경남 보안과장 장무식 ▲경남 외사과장 곽예환(승후) ▲경남 창원중부서장 허남학 ▲경남 진주서장 장충남 ▲경남 진해서장 김항규 ▲경남 사천서장 배강 ▲경남 양산서장 박동식 ▲경남 밀양서장 하진태 ▲경남 거제서장 박동신 ▲경남 거창서장 이자하(승후) ▲경남 합천서장 조성환 ▲경남 창녕서장 김병구 ▲경남 하동서장 변항종 ▲경남 남해서장 박승현 ▲경남 산청서장 이용표 ▲제주 청문감사담당관 이완우(승후) ▲제주 생활안전과장 박석일(승후) ▲제주 수사과장 이노구(승후) ▲제주 경비교통과장 강명조 ▲제주 정보과장 오영기(승후) ▲제주 해안경비단장 박생수(승후) ▲제주 제주서장 강호준 ▲본청 총무과(교육) 조종완(승후) ▲본청 총무과(교육) 박진우 ▲본청 총무과(교육) 신경문(승후) ▲본청 총무과(교육) 이석권(승후) ▲서울 경무과(교육) 김두연(승후) ▲서울 경무과(교육) 남택화(승후) ▲서울 경무과(교육) 위득량(승후) ▲서울 경무과(교육) 신현택(승후) ▲서울 경무과(교육) 김학중(승후) ▲서울 경무과(교육) 신동호(승후) ▲서울 경무과(교육) 최정환(승후) ▲서울 경무과(교육) 홍직헌(승후) ▲서울 경무과(교육) 홍영화(승후) ▲서울 경무과(교육) 박영진(승후) ▲서울 경무과(교육) 최해영(승후) ▲부산 경무과(교육) 김주전(승후) ▲대구 경무과(교육) 박형경 ▲대구 경무과(교육) 김항곤 ▲대구 경무과(교육) 이원백(승후) ▲울산 경무과(교육) 이명훈(승후) ▲경기 경무과(교육) 박광순 ▲경기 경무과(교육) 구장회(승후) ▲전북 경무과(교육) 박영조(승후) ▲전남 경무과(교육) 안병호(승후) ▲경북 경무과(교육) 설용숙 ▲경북 경무과(교육) 입주택(승후) ▲경남 경무과(교육) 김성우 ▲경남 경무과(교육) 조기준 ▲경기청 박명춘(승후) ▲서울청 유진형(승후) ▲서울청 이맹호(승후) ▲서울청 김성중(승후) ▲서울청 박명수(승후) ▲서울청 김영일(승후) ▲서울청 전병용(승후) ▲경대 총무과(대기) 김한중 ▲인천 경무과(대기) 김홍팔 ▲강원 경무과(대기) 전병량 ▲충북 경무과(대기) 이호균 ▲충남 경무과(대기) 김성동 ▲전북 경무과(대기) 박명렬 ▲전북 경무과(대기) 이명섭 ▲경북 경무과(대기) 황운모 ▲경남 경무과(대기) 김인석 ▲경남 경무과(대기) 송유찬 ▲서울청 오두성 (1월 22일자)

◆ 해양경찰청

◇본청

▲국제협력담당관 이평현 ▲감사담당관 김수현 ▲총무과장 민재식 ▲기획담당관 윤성현 ▲혁신단장 이용욱 ▲인사교육담당관 이정표 ▲재정기획담당관 송냐택 ▲장비과장 김현순 ▲조함단장 김광준 ▲통신과장 김용근 ▲항공과장 남상욱 ▲경비과장 이춘재 ▲수색구조과장 강평길 ▲해상안전과장 문현식 ▲수상레저안전과장 양동신 ▲수사과장 최명근 ▲광역수사단장 김두석 ▲정보과장 순길태 ▲해양경찰학교 이전 추진단장 김영구

◇지방해양경찰청

▲동해청 경무기획과장 이병일 ▲" 경비구난과장 윤관용 ▲서해청 경무기획과장 서장호 ▲" 경비구난과장 박철원 ▲" 정보수사과장 윤기옥 ▲남해청 경무기획과장 박세영 ▲" 경비구난과장 김용규 ▲" 정보수사과장 류재남

◇해양경찰서장

▲속초 고명석 ▲포항 김창권 ▲완도 김진욱 ▲목포 장택근 ▲군산 이수찬 ▲태안 최상환 ▲부산 류영길 ▲여수 박훈상 ▲제주 이주성 ▲총무과 대기 정갑수 박찬현 반임수 최재평(1월 29일자)